



‘행정구역 개편’ 도민 여론조사 착수

도의회, 8월 21~26일
도민 1500명 대상 진행
9월 2일 결과 발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1500명으로,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지역별 비례에 따라 표본을 추출했다.

조사 방법은 모바일 웹 조사 80%, 유선 전화 무작위 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20% 혼합 방식이다.

응답자 통계를 위한 질문을 제외한 조사 문항은 모두 4개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인지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 인지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향후 추진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한 여론조사 문항은 지난 8월 19일 오전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확정했다.

제주도의회 오춘일 행정체제개편 대응단장은 “설문은 최대한 중립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했으며,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수적 정보는 배제했다”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수행기관의 종합 분석을 거쳐 오는 9월 2일 결과 보고서의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보다 날씨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즈음이다. 제주 동쪽 하도리 해안 토끼섬 모래땅에 뿌리내려 올해도 곱게 피어난 문주란은 그래서 더 반갑다. 문주란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곳 토끼섬에서 7~8월 꽃을 피운다. 문주란 생육 북쪽 한계의 가치는 이 자연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밤새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다가 새벽 해를 품는 시간, 문주란의 안부를 묻는다.

/사진 김명선 주무관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

3·4급 복수직급 도입
고경대 부이사관 임용
안정적인 의정 지원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5일 2025년 하반기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의장 집무실에서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시인사는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직급 결원에 따른 일반 승진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승진이 동시에 시행됐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이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직급 승진했다. 이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선임 담당관 1개 직위에 대한 복수 직급(3·4급)이 도입됨에 따른 것이다.

총무담당관이 총무·인사·경리·소통협력 등 의정 지원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직급 상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수시인사에서 총무담당관실 고대경 주무관이 행정 6급으로, 의사담당관실 김영신 주무관이 사무운영 6급으로 승진임용됐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수시인사는 업무 추진력과 도민을 향한 봉사, 의정활동 지원 등의 평가를 담보한 것”이라며 “‘도민 중심 민생 의회’를 위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조직 내 활력 제고를 당부했다.

지면안내

- 2 제441회 임시회
- 4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
- 6~7 상임위 주요 활동
- 8~9 생생 의정활동
- 12 사무처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정, 도민 변화 체감토록 집행 속도 높여야”

제441회 임시회 개·폐회사

“정부 추경 뒷받침하기 위해
8월에 이례적으로 임시회 개최”

“민생 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시급성·타당성 꼼꼼히 살폈다.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중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8월 5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제주가 직면한 민생 경제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발맞춰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8월에 열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33억 원을 증액한 총 8조 1,910억 원 규모”라며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쿠폰 지원과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 공공 배달앱 활성화, 청년 일자리 지원 등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됐다”라며 “폭염과 가뭄, 고수온 등 기후 위기에 따른 1차 산업 피해 대응, 취약계층 복지 강화,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중장기 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 노력도 담겨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봉 의장은 특히 “이번 임시회는 이례적인 일정인 만큼 예산이 도민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고,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며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도의회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 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주를 찾아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도민들은 일자리 문제, 4·3 유족 가족관계 정리, 도로 및 교통 시설 개선, 부당 노동 관행,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라면서 “이 모든 의견이 국정과제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제주가 안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등 도정과 의회, 교육청, 국회의원 간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8월 14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각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살폈다”라며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집행 속도를 높여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회기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4·3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며 “또한 교육자치특별위원회는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 따른 전환기 속에서 제주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 행정사무감사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인 의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25. 9. 8.(월) - 9. 26.(금)

※ 행정사무감사 기간: 제443회 임시회 기간 중 ('25. 10. 14. ~ 10. 31.)

도민의견 접수내용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요구사항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 행정·교육 전반에 관한 불편사항 등

접수방법

- 도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www.council.jeu.kr)
- 전화 또는 우편, 직접 방문 (해당 전문위원회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이상봉 의장, 폐기물 처리·자원순환 현장 방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 방문
간담회서 관계자들과 의견 나눠
생활 환경 보전 중요성 강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7월 29일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시스템의 거점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개발공사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 의정’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방문은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 1·2동),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함께 자리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지로

서의 특수성을 지닌 제주는 생활 환경 보전과 지속 관리를 위한 자원 순환·폐기물 처리가 특히 중요한 지역으로, 관련 문제는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제주시 구좌읍에 들어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한정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해 기준 반입량은 매립 5만 6,317톤, 소각 13만 7,795톤에 달했다.

제주개발공사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는 계획과 함께 친환경 생산 체계를 고도화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먼저 찾아 재활용 회수센터와 소각시설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며 폐기

물의 친환경적 처리 과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현장 방문 후에는 간담회를 열고 운영 실태와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과 고성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소각시설 운영사인 에스텍코리아 이학영 상무, 회수센터 운영사인 가나종합건설 김태현 운영소장, 대한실업 사원 이호진 씨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학영 에스텍코리아 상무는 “사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각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육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을 바로 투입할 수 있지만, 제주에서는 즉각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각시설과 회수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은 “더운 날씨로 인해

근로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하계 휴식 시간도 8월 말이면 끝이 난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에 대해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장을 둘러보며 휴게시설 등을 점검하는 등 무더위 속 작업자들의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제주개발공사를 방문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을 공사 측과 논의하고 친환경 생산공정을 적용한 삼다수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제주-충북도의회, 지역 동반 성장 전인 ‘맞손’

**양 지역 8개 기관 협약 체결
연대와 상호 발전 약속해
고향사랑기부제 실천 의지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와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지역 간 연대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동반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양 의회는 7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양 지역의 경제·산업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제주-충북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 실질적인 지역 협력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본부장 고우일)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 △(사)제주화장품기업협회(회장 김미진)가, 충북에서는 △충청

북도의회 △농협중앙회 충북본부(본부장 이용선)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차태환) △(사)충북화장품산업협회(회장 김홍숙)가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8개 참여 기관은 6개 분야에 대해 공동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양 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류 추진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 △중소기업 진흥 및 판매 교류 활성화 △지역 화장품산업 등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양 지역 내 재난·재해 발생 시 지원활동 △그밖에 지역의 상호 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상봉 의장은 “오늘 협약은 단순한 우호 교류를 넘어, 지방의회와 지역 경제·산업 단체가 함께 설계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지역 상생 모델”이라며 “정례적 교류와 공동사업 발굴을 통



해 지방정부 간 협력의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도 “지방의회와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협약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라며 “협약식이 두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지역은 의회 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농업·중소기업·화장품 산업 등 민관 협력 기반의 공동사업 발굴과 교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최·주관으로 지난 8월 1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좌장으로,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 신호은 JIBS 제주방송 보도취재국 부장, 이남근 의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좌광일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이상봉 의장은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나눠주실 다양한 의견이 모여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

이날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도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 특히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행정체제 개편, 권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세세한 영역까지도 준비됐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쟁점으로 공론조사, 여론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결과적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과정에서도 문제 있는 것들을 교정하지 않고, 잘못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공론조사 제도만을 지키기 위해 간다면 향후에 더 많은 갈등을 자신의 입장에 따라 방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왜곡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민 여론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얼마나 깊이 있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좌광일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좌광일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안은 1년 동안의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도지사가 이를 수용했다”라며 “3개 행정구역 개편은 균형 발전과 경제 효과성 측면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보다 양호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됐다. 3개 구역 안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므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유용한 안”이라고

밝혔다. 좌광일 위원장은 또한 “행정구역역을 둘로 나누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제주시와 서귀포의 비율이 7:3, 인구와 자본,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제주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돼야 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동반성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

8월 18일 도의회서 열려...각 분야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

장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민 공론화 과정이 쉽고 부족하다. 법적으로 설치돼 구성, 운영되는 행개위의 결정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고, 도민 공론화 결과를 번복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절차적 과정, 속의 과정인 도민 공론화는 무용론에 빠질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남근 의원은 “여론조사는 하면 안 된다. 싸움을 말리려다 더 큰 싸움이 생길 것이다”라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긴 하지만, 의결 기구는 아니다. 의회 의결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권고안대로 3개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게 아닌 2개 구역 선호도가 높게 나오면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

라며 “그렇게 된다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 자체가 끝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근 의원은 또한 “지난번 의원정수 2개 선거구를 조정하는데도 의회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번은 반 이상이 줄어들게 된다. 기초의원 40명이 생긴다. 기초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특별법 개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 제정, 관계 법령 등 주민투표를 하는 순간 모든 행정이 여기에 매몰돼서 우리의 민생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신호은 JIBS 제주방송 보도취재국 부장

신호은 부장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문항과 내용, 방식, 조사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질문 문항, 보기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다. 관여도가 낮은 사람은 문항 설계에 따라 답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와 제주도기자협회가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를 했던 경

험이 있다.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덕분”이라며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도민이 알아야 한다.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도민들이 생각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게 될 것이다. 진행 상황에 대해 투명한 공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호은 부장은 또한 “행정체제개편이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 구역이 나뉘면 내 삶에 있어서 뭐가 바뀔 것인지 논의가 부족했고, 정치권의 설명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도민들에게 권역을 조정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차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이택수 대표는 “개별 정치인들에 대한 선호도에 의해 왜곡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문항을 설계할 것”이라며 “다만 모바일로 참여하기 어려운 60대 이상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기 때문에 20%의 비율로 RDD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해 안심번호는 선거 때에만 쓸 수 있어서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와도 이번 여론조사엔 안심번호를 쓸 수가 없다”라며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에서 설문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설문 문항을 각 통신사에게 전달한 후, 이동통신사 3사가 직접 발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 개강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 현장
20~70대 다양한 연령층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제주도민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 35명이 참여한다.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 △시민참여 제도와 실습 △의회제도 이해 △갈등 해결 및 정책 공론화 방법 등 총 8회차 수업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특히, 이번 하반기 아카데미에는 문



학, 민속학, 건강관리, 예술 등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가 도민 여러분의 민주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강식을 마친 뒤 첫 수업으로 이완국 웃음치료 강사의 ‘웃음으로 여는 행복 세상’, 양석원 자유스콜레 대표의 ‘시민이 만드는 풀뿌리 민주주의’ 강연이 잇따라 펼쳐지며 수 강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청렴의식 함양...반부패 청렴 교육

도의회, 8월 14일 청렴 서약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14일 오후 3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의 청렴연수 과정으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류재식 전문 강사가 △부패방지 일반론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주요 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과 법과 원칙 준수, 청렴한 사회 실현을 위한 슬선수범을 다짐하며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반부패 청렴 교육이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있어 스스로 청렴의 가치를 정립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연중 부패 방지 교육 등 평소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대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목적이며, 특히 이날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에 중점을 뒀다.

제주성교육코칭센터 김정량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우리 함께 성인지 UP 합시다’라는 주제로 고위공직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예산 화두에 올라

제2차 추경에 관련 예산 198억 편성 상임위 소속 위원 각각의 의견 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제441회 임시회 회의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화두로 올랐다.

지난 8월 8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데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내놨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예산은 대부분 감액됐는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예산은 198억 원이나 편성이 됐다”라며 “주민투표가 요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묻는다”라고 밝혔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치·서흥동)은 “행정체제 개편이 목표대로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내년 7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2030년에 맞춰 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장기 과제 추진을 주문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됐다”라며 “도와 의회가 이전 발언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절박하지 않구나’, ‘요구가 그렇게 크지 않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결론이 날 때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라며 “198억 원으로 무엇을 할지 도의 적극적인 설명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호형 위원장도 “오랜 시간 끌어온 도민 염원인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잇따른 물놀이 안전사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회의 앞서 포구·해수욕장 방문 현수막 외 안전 관리 장치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제441회 임시회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른 물놀이 사고를 도마 위에 올리며,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지난 8월 7일 열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살펴 보기 위해 한림 월령포구와 괵지해수욕장을 방문,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현장에는 다이빙 금지, 수영 금지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있었다”라며 “포구는 물 밖에서 봤을 때 위험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심을 정확히 알리는 등 경각심을 키우는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포구는 물놀이 지정 구역으로 돼 있지 않다. 어촌 어항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그럼에도 근거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물놀이 가능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 등 안전 관리에



대해 보완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2차 추경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들어오긴 했다. 하지만 본 예산에 있어야 했다”라며 “이제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길호 위원장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내용을 고민해 달라”고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소속 생활지원사들이 사용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치 추적 앱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생활지원사업무일지로 활용되는 모바일앱이 불안정해 위치 차이가 나는데, 센터장은 오차가 생길 때마다 확인서나 경위서를 쓰도록 했다”라면서 “앱 사용을 중단하고, 센터 내 직장 갑질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도 있었던 만큼 행정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현 정부가 국가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이원화를 언급하고 있다. 세종은 자체 용역을, 강원도는 토론회를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데 제주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횡령 ‘도마 위’…질책 이어져

관리 부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문 ‘수소트램’ 경제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제4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시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횡령 사건 관련 질책들이 나왔다.

지난 8월 8일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종량제봉투 횡령 사건이 종량제봉투 생산과 판매, 재고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오랜 기간 횡령이 이뤄졌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건, 내부 감독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고, 간과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자료에 마이너스 재고가 잡혀 있다. 입출고 내역부터 결제, 관리 시스템, 세입까지 제대로 작동된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판매 금액이 세입으로 잡히는 데 5년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느냐”라며 “이를 가능하게 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도 “해당 부서 직원의 근무 기간이 공무원 중 2명이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라며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제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거래대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된 가운데 우려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만족할 수준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라며 “제주시 동·서를 연결해 출·퇴근 시간대 직장인들이 삼양동과 신제주를 20~30분 내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황국 의원은 “재무성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매우 낮다”라며 “65세 이상과 19세 미만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한다. 이미 1년에 1,000억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 수소트램을 병행하면 산출 불가의 적자가 생긴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정민구 위원장 역시 “대중교통 무료 확대도 현재 20~64세만 요금을 내는데, 해당 연령대는 경제활동을 이유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수소트램을 도입해야 한다면 일정구간의 관광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관광체육 소관 업무 전반적인 점검 요구

전국체전 승마 불투명에도 추경 ‘우려’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나우다’ 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 국민의힘, 애월읍갑)는 제44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동의안 18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소관 업무보고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8월 7일 열린 회의에서는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승마경기장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20억 원을 추경으로 요청한 가운데,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읍)은 “전국체전 승마 종목과 관련해 80억 원 수준의 개보수 비용이 필요하다는 도의 내부 보고가 있었는데, 20억 원으로 가능하겠나”며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했는데 대한승마협회가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고태민 위원장은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인상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기존 주차료에서 인상률이 5배에서 13배에 이른다”라며 “주차장 증설 없이 주차료 인상을 제기한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읍)은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현황을 도마 위에 올리며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사업자가 단지 내 토지를 분리 매각하지 않기로 했으면서도 결국 쪼개기로 매각하면서 지역 사회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라며 지적, 과거 오라관광단지를 두고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처럼 법과 조례 등의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관광증 ‘나우다’와 관련해 “제주도관광협회가 운영하는 탐나오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나우다’ 할인 제공까지는 중복이라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라며 “도와 관광공사, 관광협회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제주도와 하이브가 업무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케이팝 공연 활성화에 기대를 모았지만 이후 진척된 상황이 없다”라며 “협약을 위한 협약은 아닌가”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수·축경제 현안 사업 차질 없는 추진 당부

가격모니터링단 예산 전액 삭감에 우려
“에너지대전환 프로젝트 적극 추진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연동갑)는 제4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또한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 8월 8일 열린 회의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도정은 휘발유·LPG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에너지 가격 모니터링 예산’을 지속 편성해 왔다”라며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시 에너지 제품의 가격 감시기능이 약화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올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김승준 의원은 이어 “2023년과 2024년 민간감시단을 통한 가격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유통단계별 가격 비용 마진이 공개되면서 제주 지역 유류 가격이 높은 원인을 파악하고, 도민 사회에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었다”라며 “가격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 구조에 대한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새 정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를 보면 RE100



산업단지, 한국형 차세대 전략망 구축 등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중단기 계획에 제주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권 의원은 “장기 계획인 에너지고속도로에 제주가 포함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구성·출범한 ‘혁신산업 과제 발굴 전담팀’의 활동 실적을 보면 나열식 과제 발굴과 대중양절충 및 협력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에너지고속도로에 제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양영식 위원장 역시 “에너지 정책에서 제주가 상당히 소외됐다”라며 “에너지 산업은 도민 삶에도 매우 중요하므로 집행부는 촉각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제주·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해 6개 사업에 총사업비 6,690백만 원이 투입됐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출항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도정은 신규 항로 개설로 중국산 원자재와 생필품 등이 제주로 직수입될 것이라 했지만, 질이 낮은 중국산 농산물도 수입될 수 있어 국내 시장 수급 불안정과 병해충 유입 등이 우려된다”라고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현장 혼란 최소화” 주문

구독료 관련 교육재정 부담↑
우려 속 대응책 마련 요구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제441회 임시회 회의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 8월 7일 열린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학교의 우려, 교육단체의 우려, 의회의 우려를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학교의 2학기 혼란은 교육청이 온전히 감당하면서 처리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꼬집었다.

고의숙 의원은 이어 “계약법 상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왜 선급금 방식으로 처리했는가”라며 “구독료와 관련된 교육 재정 부담은 결국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어떤 학교는 시행하고, 어떤 학교는 시행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계속 야기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에서 명확한 매뉴얼을 정해야만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창식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은 “디지털교과서가 2학기에는 교육자료로 전환되는데,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계약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으며,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빠르게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정이운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도 정확한 지침 없는 대응은 혼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에서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동부지역에 신설하려 한 특수학교 분원 후보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지에 대한 사전 검토 부실 등 관련 사안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지난해 11월 기존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끝나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라며 “뜻밖의 암초를 만나 어찌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시청과 유기적인 협의가 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식 의원도 “최초 부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합한 부지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됐었고 결국에는 취소가 됐다. 도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체 부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4·3특별위 구성 완료...하성용 위원장 선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4·3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장에는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이, 부위원장에는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선임됐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흥동)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읍) △김창식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4·3특별위원회 활동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예정됐다.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점검 및 추가 입법 △추가진상조사 현황 점검 및 정책 발굴 △4·3 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 △4·3 전국화·세계화 확산 등의 활동을 해나가게 된다.

하성용 위원장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비롯해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기

반이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미진한 과제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4·3특별법 개정 및 추가 입법에도 최선을 다해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12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4·3특별위원회가 첫 공식 일정으로 4·3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첫걸음을 뗐다.

지난 8월 20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회장,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김남훈 평화기행위원장, 박건도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제주4·3도민연대 양동운 대표, 제주4·3연구소 김창후 소장 등이 참석해 4·3특별위원회와 상견례를 하고 현안을 공유했다.

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 출범...위원장에 이정엽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는 지난 8월 5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 부위원장에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선출했다.

특위는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박두화 의원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정엽

의원 △정이운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주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실질적 대응 △교육·의료·일자리·돌봄 등 분야별 실효성 있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정엽 위원장은 “현재 제주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정책 대응의 초점을 고령사회 문제로 확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의 실질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

다”라고 말했다.

한편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의장실에서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외부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김문형 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장, 김승자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장, 김인순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문준식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장, 한성울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현경철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위촉 자문위원들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민생경제안정특위 새롭게 구성...위원장에 강봉직 의원 선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이, 부위원장에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선임됐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

라동), 현기중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특위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향후 1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제주 지역 상점가 폐업 증가와 내국인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강봉직 위원장은 “제주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봉직 위원장은 또한 “이번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은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실천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위 구성...강동우 위원장 선임



지속 가능한 교육 자치 실현을 목표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는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

동)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강동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홍인숙 의원이 선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는 △교육자치의 현황 및 성과 분석 △지속 가능한 교육자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주요 과제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강동우 위원장은 “제주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지향적 전환을 위해, 특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회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교육자치 특위는 앞으로 교육자치 관련 토론회, 현장 간담회 및 전문가 초청 연수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 기능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줄여 나가야”

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
8월 21일 정책 토론회서
안정적인 교사 공급 강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엽, 국민의힘, 대륜동)는 지난 8월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지역 영유아 보육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주제로 진행됐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았고, 공병호 숙명여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공병호 교수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줄여야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과 교사의 전문성 실현’,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역에 따라 교사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많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인 교사 공급을 위해 교사 양성의 전반적인 정책 수립은 물론 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춘 반 편성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서도 김정연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하향은 단순히 ‘편하게 보기 위해’가 아니라 안전관리, 발달 지원, 정서 안정, 놀이·교육의 질, 응급 대응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특히 영아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위험 상황이 순식간에 발생하므로 두 명의 교사

가 각 아동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오명녀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역시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 2명을 시작으로 1세 3명, 2세 5명, 3세 10명, 4세 12명, 5세 15명으로 서서히 하향되기를 바란다”라며 “결과적으로 정신적, 정서적 양육부담을 나누어 부모의 육아 부담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엽 위원장은 “현재 많은 보육현장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요구받고 있다”라며 “그 중심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라는 숙제가 놓여있다. 이러한 시기에 개최되는 토론회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과 가정의 모두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치유센터 연계 활용 방안 중간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양홍식,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월 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해양치유센터 연계 활용방안 기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주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숙박, 관광, 의료, 식음료, 쇼핑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 조성 방안 및 융복합 치유프로그램을 활용한 해양치유서비스 벨트 조성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양홍식 대표의원은 “제주 해양치유센터는 2024년부터 5개년간 총사업비 4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8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화됐다”라며 “타 지자체의 경우 내년도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공모를 대비해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양치유지구 지정은 제주의 미래 해양관광 전략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등 행정적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 감면 활용 모색

재정경제포럼, 보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월 2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활용 모색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를 수행한 지방재정전략연구소 홍성선 소장은 “현재 제주 지역의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 실태에 맞는 감면을 설계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두화 대표의원은 “지방세 수입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취득세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경기,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며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화도시 활성화 전략 방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강경문,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 8월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시 문화도시 활성화 전략 방안에 대한 최종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역 수행 책임을 맡고 있는 이광준 서귀포시도시문화센터장의 발제와 참여자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이날 제주시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15가지 전략과 함께 오는 2029년

까지 연차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에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주시의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과 함께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강경문 대표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주시 문화도시 활성화 전략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신기한 제주어 ④1

좁무치다

(동사) 까무러치다

젠디, 아닐케라 그 아방이 조통스고가 나서마썸. 벳덜이영 밤늦이 젓어 텡기멍 코가 투라지게 먹단 이제랑 집이덜 거주긴 후연 집더레 오는다, 동네 니커림질 횡단보도에서 와리게 돌리던 택시가 급후게 멈춰사명 받 아분 겅주. 아방은 질바닥에 멧 번 둥글단 좁무쳐 불언마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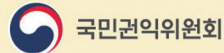
- 젠디: 그런데
 - 아닐케라: 아닌게 아니라
 - 밤늦이: 밤늦게
 - 젓어텡기멍: 휘저어 다니면서
 - 코가 투라지게: 코가 비뚤어지게
- 거주긴 후연: 가가지 하면서
 - 니커림질: 네거리, 십자로
 - 와리게 돌리던: 성급하게 달리던
 - 멈춰사명: 멈춰서면서
 - 겅주: 거지요

양전형 저 「제주어 용례 사전①」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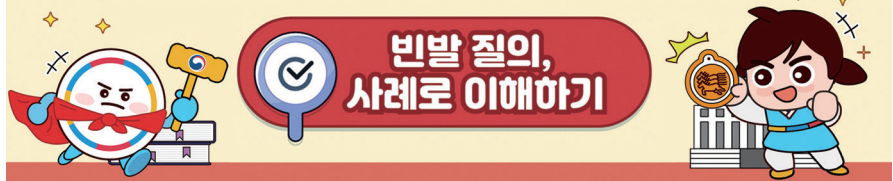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4차 변경)

월 별	회 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 처리 안건
계	11회	총 129일 • 정례회 2회 / 48일 • 임시회 9회 / 81일	본회의 30일 상임위 47일 예결위 22일 공휴일 30일	
2월	제435회 임시회	2.18.(화) ~ 2.27.(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3월	제436회 임시회	3.18.(화) ~ 3.25.(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437회 임시회	4.4.(금) ~ 4.23.(수) (20일)	본회의 7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6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 제1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438회 임시회	5.23.(금) (1일)	본회의 1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6월	제439회 제1차 정례회	6.10.(화) ~ 6.27.(금) (1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예결위 6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440회 임시회	7.16.(수) (1일)	본회의 1일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 등
8월	제441회 임시회	8.5.(화) ~ 8.14.(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3일 공휴일 2일	• 제2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9월	제442회 임시회	9.9.(화) ~ 9.16.(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443회 임시회	10.14.(화) ~ 10.31.(금) (1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2일 공휴일 4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44회 제2차 정례회	11.11.(화) ~ 12.10.(수) (30일)	본회의 7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8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 2026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45회 임시회	12.15.(월) ~ 12.19.(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 제3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21일
※ 연간 의사일정은 현안사항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Q&A 01 퇴직한 공직자에게 강의를 요청하거나 자문을 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YES

퇴직자에게 강의·자문을 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자(A)가 해당 강의·자문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B)를 최근 2년 이내에 지휘·감독했던 자에 해당한다면, 공직자(B)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A 02 공공기관(A) 비상임이사가 운영하는 업체와 공공기관(A)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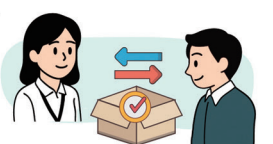
NO

비상임이사가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지 않는다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별도의 이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임이사가 해당 수의계약과 관련한 심의·의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A 03 공공기관 직원(A)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해당 직원(A)은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닙니다.

YES

계약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A)의 배우자가 운영한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A 04 공직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대가 있는 서면 자문을 요청받았는데,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YES

공직자가 해당 서면 자문을 통해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해당 자문은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이 경우, 자문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Q&A 05 공공기관(A)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 상대 업체가 해당 기관(A)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인가요?

NO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 거래 등을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소 연

제주한라대학교
레저스포츠과 1학년

“제주 자치의 중심에서 보낸 한 달”

‘인턴 체험’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현장을 만나보는 기회가 주어졌다. 뉴스로만 접하던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나의 인턴 체험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정리 및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됐다.

이 작업을 통해 도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단순한 데이터 정리가 아닌 실제 정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

는 뜻깊은 활동이었다.

의정자료센터 내 도서 정리도 도왔다.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반복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의정활동의 배경이 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공간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 달의 인턴 체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본회의 방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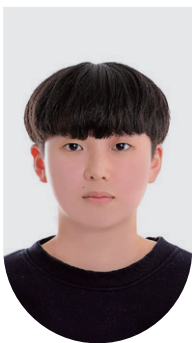
평소 화면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회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

의원님들은 물론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더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나의 인턴 체험을 한마디로 하자면, ‘제주 자치의 중심’에서 보낸 한 달이라고 정리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아침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입법지원담당관실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양 예 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많은 분의 헌신을 알게 된 시간”

7월 한 달 동안 총무담당관 총무팀 인턴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제주도의회 정책 포럼에 참여한 이후 의회 활동에 관심이 커져 인턴 활동을 희망했는데, 실제로 참여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특히, 총무담당관은 전공 수업을 통해 접한 곳이었기에, 하루 하루가 더욱 설렘다.

인턴 기간에 학교에선 배울 수 없는 실무를 현장에서 보고 배우며, 다양한 경험

을 쌓을 수 있었다.

제주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과 7월 공감·소통의 날 등 여러 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보조하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애쓰는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의 노력이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행사 현수막부터 영상 제작, 자리 배치까지 행사 곳곳에서 직원분들의 수고가 담겨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7월 임시회 방청을 통해 본회의

운영과 안건 처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본회의 현장에 실시간으로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제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많은 분의 헌신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진로를 미리 경험하는 것과 함께, 인턴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 예 립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보이지 않는 노력의 가치를 배울 수 있어”

7월 한 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턴 체험으로 의사담당관실에 근무했다.

인턴으로서의 첫 업무는 의정 체험 설문과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조사 내용을 데이터화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의정 체험과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의 마무리 절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도민이 제안한 의견을 단순한 피드백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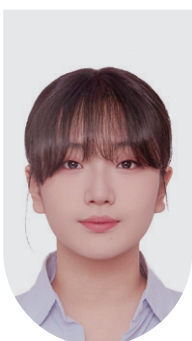
본회의장에서 의정 체험 활동을 준비하며 회의장 정리를 돕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시작과 끝, 모든 순간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최대한 실제와 유사한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많은 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특히 직접 정리를 도운 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기도 하며, 의정 활동

의 진행 과정을 눈으로 직접 바라보며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 인턴 활동을 하면서 의정 활동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몸소 느꼈다. 의사담당관실 직원분들의 살가운 미소와 따뜻한 배려 덕분에 그 시간이 더욱 따뜻하게 기억될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매일 따스하게 챙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 민 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의정 활동, 기록의 현장을 가까이서 접해”

2025년 7월 한 달 동안 공보관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정치의 현장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다.

회의와 각종 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정치가 단순히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이고 조율되며 하나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복잡함 흐름임을 알게 됐다.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와 사람들의 표정, 발언 하나하나가 의정 활동

의 중요한 일부라는 점이 인상 깊었고, 이를 통해 정치라는 분야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됐다.

그 과정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공보관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 사진과 영상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창구였다. 의회가 무겁기만 한 곳이 아닌 친근한 곳이라는 것을 촬영하면서 느끼게 되었다. 촬영

보조를 하며 현장을 다니고, 의원님들의 인터뷰 준비를 돕던 순간들은 업무이지만 즐겁고 보람찼다.

짧지만 밀도 있었던 한 달이었고 정치와 기록, 그리고 사람을 잇는 소통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함께 웃고, 고민하며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공보관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다.

“민주주의 배워요”...방학에도 의정체험 활기

동홍동 어린이주민자치회
탐라교육원 교육참여 학생
제주 아이링크 참여 아동
연이어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운영 중인 청소년 의정 체험이 여름 방학에도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8월 6일에는 동홍동 어린이주민자치회 15명이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에 참여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참가 학생들은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어린이 보행안전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 전자표결을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휴식권 보장’, ‘4·3의 역사적 의미와 학생들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도의원과의 만남’에 자리한 오승식 교육위원장(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은 “이번 의정체험은 동홍동 어린이주민자치회 학생들이 지역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를 이끌어 갈 리더로 성장하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도 함께 참석해 “청소년들에게 정치나 의회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처럼 직접 참여해 보면 민주주의가 삶과 밀접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7~8일에는 탐라교육원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 참여 학생들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에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자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을 거쳐 전자표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3분 자유발언 시간에 ‘4·3의 역사적 의미와

학생들의 역할’, ‘1회 용품 줄이기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도의원과의 만남’에서는 김창식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서부)과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이 자리했다. 김창식 의원은 “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도민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동우 의원도 “의정체험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이번 의정체험이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

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8월 20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주 아이링크 참여 아동 1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이 진행됐다. 제주 아이링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아동권리옹호단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참여위원회가 함께하는 아동 민관 교류사업이다.

참여 학생들은 실제 도의회 본회의 의사 진행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날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도의원과의 만남’ 자리에 참석해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의회 전입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의회운영위 실무 교육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는 지난 8월 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신규 전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도의회 전입 직원 7명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이날 △지방의회 회의 운영 절차 및 실무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요령 △의정 지원 실무 사례 등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실무 역량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임정은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인력이 도의회 운영 체계를 빠르게 습득하고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정책을 배우다”

하반기 대학생 인턴제 종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마무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지역 대학생들의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정지원 업무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25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했다.

이번 인턴제는 대학에서 추천받은 4명의 대학생들을 각 부서에 배치해 부서 특성을 경험하면서 입법 및 정책 자료 수집, 의정 홍보, 의사 진행 지원 등을 수행했다.

특히 본회의 방청 기회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입법지원담당관실에 근무한 김소연 학생(제주한라대 레저스포츠과 1학년)은 “정책 입안 시 단순히 내부 논의가 아니라 도민 의견이 모여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라며 “특히 본회의를 방청하며 평소 눈으로만 접하던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봉 의장은 “대학생 인턴들의 열정과 성과에 감사드리며, 이번 인턴제가 청년들의 의정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민생 중심의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